

‘초국적 사회적 대화’가 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지하듯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화는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제3세계에 대한 식민화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지난 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폭발한 모순은 한동안 냉전(cold war)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서 소강상태를 겪다가, 세기 말 냉전체제조차 흐지부지되면서 이제 보다 뚜렷하게 중심부와 주변부 자본주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보다 빨라지고 있는 자본의 운동하에서 중심부 자본들이 주변부 노동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나아가 그 과정에서 운동하는 중심부 자본들끼리 어떠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준수하느냐는 언제부터인가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지구화해 온(globalized)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조직체는 다양한 회원국들을 향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로 한 나라의 자본과 그 나라의 노동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그 나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적용해 가라는 식의 방법론에 기대는 것이었다. 한 나라의 자본과 다른 나라의 노동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글로벌한 통일적 국제 규범은 결여되었고, 그 문제는 개별 국가들 양자간의 외교적 사안 정도로 존재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약 10년 사이에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공

급망(global supply chains)이 두터워지고 확장되면서 그 내에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같이 -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정의 흐름이 형성되기도 하고, 초국적 자본(MNCs)에 대항하여 해당 자본 투자처의 노동조합들이 통일적인 규범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노동 거버넌스'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ILO도 새로운 범주의 국제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내려 노력해 왔다. 단지 회원국들의 노동시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을 초월하여, 초국적 자본들을 상대로 거대한 업종이나 지역, 혹은 개별 기업들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내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놓고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활성화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이른바 초국적 사회적 대화, 흔히 쓰는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 '초국경적(cross-border)' 사회적 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 역사도, 규정력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 10년간 새로운 글로벌 노사관계의 형성을 향한 이러한 노력은 꾸준히 진화해 왔다. 멀게는 70년대에 OECD나 ILO가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나 UN의 글로벌 컴팩트 채택, 비즈니스와 인권을 위한 이행원칙의 정립 마련 등의 시도들 모두 그와 관련이 된다. 다양한 지역통합을 통한 공동의 규정, 다양한 국가들의 다자간 및 개별 국가들의 양자간 무역관련 협정들(FTAs)에 결부된 노동시장에 대한 공동규정들도 또 다른 단면이다.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감사활동과 초국적 기업협약의 체결 등의 발전은 최근의 가장 제도화 수준이 높은 시도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받아 올해 초 ILO는 초국적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글로벌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들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글로벌 협약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걸음 진전된 노력을 전개했다. 약 사흘간 지속된 이 회의에서는 그간 전개되어 온 초국적 사회적 대화라고 칭할 수 있는 다양한 흐름들의 적실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결론을 채택하였다. ILO에서 초국적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모색하며 전개한 초국적 사회적 대화가 약한 수준으로나마 국제적 규범을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회의는 치열하면서도 진지했다. 필자도 각 대륙을 대표하는 몇몇 국가들에서 추천한 정부

대표 전문가군의 일원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ILO 사무국에서 마련한 배경보고서와 합의문 초안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해 갔다. 사용자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별도의 새롭고 강력한 규제 방식을 피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동조합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이 획득한 노사관계적 수단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 — 대표적으로 MNCs들을 대상으로 하는 TCA(Transnational Company Agreement)의 체결 — 과, 정부를 배제한 노사 주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자율적 규제의 활성화를 선호했다. 정부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정부들의 보다 깊은 개입력 행사와 함께 전통적인 노사를 넘어 시민사회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폭넓고 새로운 규제방식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노사정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물밑에서 노측과 사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서로 합의를 보았다. 전반적으로 논의는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를 했으며, 상대적으로 아시아는 매우 소극적이고 초보적인 차원의 인식 표출에 머물렀다.

결론에서 전문가들은 각국의 정부들, 노사단체들 및 ILO를 향하여 초국적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각각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아직까지 초국적 사회적 대화의 기준설정 및 보다 세부적인 구성요소들과 그것의 작동방식에 대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향후 얼마나 강하게 또 언제부터 초국적 사회적 대화의 틀이 구체화되어 글로벌 자본과 노동에 대해 규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적어도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글로벌 노동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의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서 이러한 국제적인 새로운 규범의 구성에 노사정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이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과의 투자교역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라 더욱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거둔 민주적 노사관계의 성취와 한계를 토대로 다양한 나라들에서 우리가 행할 투자행위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 규범의 내면화와 그것을 토대로 한 상호작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가 미진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체제하에서 단순히 ‘국내 먼저 국제 나중’과 같은 단계론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안팎을 막론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뿐 아니라, 기왕이면 국제적인 표준규범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하고 그것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태도로 임했을 때 궁극에 그리고 넓게 보아 우리의 국익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에 우리 정부와 노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KCL